

행정 통합에 교육만 따로 갈 수 없어 단일 교육감 체제로

인사·재정 통합…22개 시군·광주 5개구 아우르는 거대 조직 탄생
광주·전남 교육행정 큰 변화 예고…교육감 선거에 지각변동 불가피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통합 교육감 선출'을 확정 지으면서 지역 교육계에도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 교육행정에 큰 변화는 물론,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 대전환 예고 = 25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정선 시교육감, 김대중 전남 교육감,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 내 통합 교육감 1인 선출'에 합의했다. 광주전남 통합의 완결에 해당하는 교육의 행정통합을 이끌어냈다.

광주의 도시형 교육 인프라와 전남의 농어촌·도서 지역 특수성이 결합한 '단일 교육 모델'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고사하는 지역 교육을 살릴 최후의 승부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일 교육 수장의 탄생은 인사와 예산의 중복 투자를 막고 광역 단위의 거대 교육 행정 체계를 구축해 미래 세대 통합의 길을 열 것으로 보인다.

교육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것은 지난 7일 광주시청과 교육청이 통합 원칙에 전격 합의하면서부터다.

이후 시도는 광주시와 전남도를 오가며 지역별·직능별 공청회와 설명회를 총 7차례 이상 개최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당초 교육계 내부에서는 광주의 도시형 교육 모델과 전남의 농어촌형 교육 모델이 물리적으로 결합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그동안 김대중 전남 교육감은 통합 선거에 적극적인 반면, 이정선 광주 교육감은 신중론을 펴며 온도 차를 보였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약속과 행정통합의 속도전이 맞물리면서 '교육만 따로 갈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이번 3차 간담회에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6월 지방선거를 통합 선거로 치르기로 못 박으면서 교육감 단일 선출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

통합 교육감 체제로 전환되면 가장 큰 변화는 인사와 재정의 통합이다.

현재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으로 이원화된 행정 조직이 하나의 교육청으로 재편된다. 이는 22개 시군과 광주 자치구를 아우르는 거대 교육 조직의 탄생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3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광주 교육기획 대토론회에서도 교육통합, 도농간 교육 불균형, 통합 교육감의 제왕적 권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태 시교육감 출마예정자는 "광주는 도시 집

중화 현상 때문에 교육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

성이 있고, 전남은 외곽 지역에서부터 교육 황폐화가 우려된다"면서 "현 체제에서 두 교육감이 대책을 세운 후에 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합 교육감의 제왕적 권한', '특권교육' 문제도 거론됐다. 한 교사는 "통합되면 교육감 한 명이 막대한 예산 집행권과 모든 학교, 교원 인사권을 갖게 된다"며 "교육감의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역학에 통합명칭 등 유보=이날 회의에서 명칭과 주소재지가 확정되지 못한 배경에는 지역 구 이해관계를 둘러싼 의원들 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다.

당초 회의에서는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안'이 다수의 지지를 얻는 듯했으나, 명칭에서 '광주'를 앞세우는 대신 주소재지를 전남으로 넘겨주는 '광주전남특별시'·'안'(약칭은 삭제)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워 특정 지역에 주청사 배치를 요구하는 이른바 '정치적 네고' 성격의 주장이 나오면서 논의가 꼬였다.

특히 소재지 결정을 두고 "지역민의 행정 접근성과 불편 해소가 최우선"이라는 원칙론과 "지역 간 딜을 통해 실리를 쟁겨야 한다"는 현실론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강기정 시장이 27일로 결론을 미룬 것은 이러한 정치적 공방에 휘둘리지 않고 시도민 전체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조합'을 도출하기 위한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명칭과 청사 소재지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1차 기안으로 통합 지지체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기로 했다"면서 청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광주청사와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에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다면 김 위원장은 "오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다시 한번 명칭과 청사 기안을 토론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27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열리는 4차 간담회에서 명칭과 소재지라는 마지막 퍼즐이 어떻게 맞춰지느냐에 따라 이번 주내 특별법 발의라는 목표 달성을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통합은 정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최종 도출될 결론이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야만 특별법 2월 국회 통과와 6월 통합 선거 등 통합을 완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개시하셨어요?" … "눈물날라카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울산 울주군 운양읍 남창옹기종기장을 방문해 나물을 구매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 대통령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

미국 새 국방전략에 입장 밝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이 대북 억제에 대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자국 방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 내용을 분석한 기사를 링크하고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 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했다.

동맹국인 한국이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도발 방지 등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전력 첨단화 등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및 지난달 핵협의그룹(NCG) 공동연론성명에서 이 같은 방향의 '역할 조정'을 협의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국방전략 기조에 호응을 표하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등의 자주국방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 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인 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특히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 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광주문화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